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석무



‘절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화무십일홍이요, 권불십년이다’, ‘부패한 나라는 절대로 망한다’라는 세상에 떠도는 이야기들은 그냥 떠도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에 가까운 정도로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말임에 분명하다.

물론 언론매체를 장악했던 권력, 모든 인사는 왕좌관을 거쳐야만 이루어진다던 그런 권력, 그들은 모두 ‘뇌물’이라는 사슬에 걸려 막강한 권력이 힘을 잃고 옥망의 별빛을 바라보고만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에 의해 권력은 십 년에 이르지 못하고, 5년에 그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권불 5년이다’라고 본다면 권력의 무상함은 옛날의 일과 다르다. 상왕의 권력이라던 ‘영일대군’, 최고 권력자의 멘토라던 ‘방통대군’, 차관급이면서도 왕의 지위에 가까운 권력을 지녔기에 ‘왕차관’이라던 권력자들이 연달아 구속되어 감옥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세간의 이야기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인지 참으로 신동할지 모르겠다.

우리의 최근 역사는 ‘뇌물’이 항시최근 면서 언론매체를 장악했던 권력, 모든 인사는 왕좌관을 거쳐야만 이루어진다던 그런 권력, 그들은 모두 ‘뇌물’이라는 사슬에 걸려 막강한 권력이 힘을 잃고 옥망의 별빛을 바라보고만 있게 되었다.

뇌물죄는 반드시 들킨다

이었다. 청와대 안방에서 뇌물을 쟁했다고 임기가 끝나자 두 전직 대통령(전세·노씨)이 뇌물죄로 처벌 받았다. 대통령의 아들들이 대통령 재임 중에 뇌물죄로 수감되어 단죄되었는가 하면, 가까운 친인척이나 최측근의 대통령 주변인들까지 처벌되었다. 뇌물죄는 뇌물죄이지만, 왜 그런 범죄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가.

아버지와 아들은 천륜(天倫)의 관계다. 대통령의 아들도 뇌물죄만 확인되면 천륜도 어찌지 못하고 구속수감 수밖에 없는 데, 여타의 친인척이나 실세들이라고 빠져나갈 어떤 길이 있었는가.

‘세상에 완전범죄는 없다’는 말도 우리

가 경험한 바로는 진리에 가까운 말이다. 공직자들의 청렴만이 나라를 바로고 깨끗하게 다스릴 수 있다고 역설했던 실학자 다산 정약응은 그의 ‘목민심서’에서 명확하게 밝혔다.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어느 누가 비밀스럽게 하지 않으리오마는 한방중에 주고받은 행위라도 아침만 되면 벌써 소문이 꼭 퍼지게 되어 있다(貨賂之行 靡不秘密 中夜所行 朝已昌矣)”며 뇌물 수수는 반드시 들킨 수밖에 없다는 경고를 거듭 주장하였다. 권력은 유한하고 뇌물은 반드시 들키게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

런 범죄행위는 근절되지 않는 것인가.

이중 해서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할 단계가 아닐는지. 우리나라가 경제 강국이라고 떠들지만, OECD 가입 34개 국가 중에서 삶의 질이 낮기로는 32번째라니 할 말을 잊을 지경이다.

뇌물의 공화국이고, 부패의 공화국에 다른 어떤 명제가 있을 수 있겠는가. 뇌물죄를 규정할 헌법을 손질할 때라는 생각이 든다.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받고도 뻔뻔스런 범죄자들은 끝까지 우기는 것이 ‘대가상’이 없음을 증명하느라 발버둥을 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재판에서 대가상이 없다는 입증으로 무죄를 선고받

아 죄가 없음을 공인받는 경우도 잦다.

이런 해피망측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아무런 대가상 없이 그냥 수억, 수십억을 퍼줄 수 있는 것인가. 몇백만 원이나 몇천만 원인데, 그냥 남에게 주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를 도와주는 일이 아닌데서야, 국가의 최고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마구 퍼주는 그런 일이 어떻게 실제로 가능한 것인가. 어떤 이유로도 권력자나 고위공직자는 돈을 받을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하고, 일단 돈을 받으면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하는 것이다.

대가상을 논하고 따지는 일 자체가 세상을 회통하고 만인을 웃기게 하는 일임에 분명하다. 가난한 거지에게 몇천 원, 몇만 원 주는 일도 아깝고 아쉬운데, 부모형제간도 아닌 남에게 거액의 돈을 그냥 퍼줄 수 있겠는가. 이런 법의 맹점 때문에 행여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뚫리고 있고, 뇌물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나라가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도 최고책임자는 입을 다물고 말이 없다. 권력은 유한하고,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하는데, 입만 다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인가. <다산연구소 이사장·단국대 석좌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광주 2순환로 민자구간 매입 서둘러야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에 대한 광주시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1구간 운영자인 민간업자와의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직접 매입해 운영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손을 들어주었기 때문이다.

중앙행정심판위는 10일 1구간 운영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주)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원상회복을 위한 감독명령 취소 청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0월 광주시가 ‘사업자의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라’는 감독명령을 내린데 대해 사업자 측이 중앙행정심판위에 ‘감독명령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1구간은 민간업자인 대구건설콘크리트가 지난 2000년 완공했으며 개통 3년 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에서 넘어갔다. 시는 민간업자에 대한 과도한 수익 보장으로 지난 11년간 1190억 원을 보냈다.

광주순환도로투자(주)는 지난 2003년 1차 자본변경을 통해 자기자본비율을 29.91%에서 6.93%로 줄였으며, 2004년 2차 변경을 통해 선순위 차입금 1420억 원에 대한 이자율을 7.25%에서 10%로 올렸다. 이로 인해 애초보다 무상사용 기간 종료시점인 2028년까지 무려 4천 880억 원의 이자를 추가 부담하게 됐다. 당시 이런 불공정 계약이 어디 있었는가. 광주시가 뒤늦게 원상회복과 함께 그동안 출자자·대주주에게 귀속된 이익을 이용자 권익으로 환원시키라고 감독명령을 내린 건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 하겠다.

그동안 광주시는 민간업자와의 ‘최소 운영수입보장’이라는 불공정 계약을 매년 200억 원 이상의 적자보전금을 지원하면서도 통행료 인상 등 시민부담을 가중시켜왔다. 사업자가 법적 대응을 하겠지만 이번 결정을 계기로 더 이상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도록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매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상득 구속, 전적으로 대통령 책임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슬로몬저축은행 등에서 7억여 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결국 10일 밤 구속 수감됐다. 대통령의 형이 동생의 재임 중 수감된 것은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정권 초부터 이 전 의원이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이 의원과 이 대통령은 듣지 않았다. 형제 스승로 정권 말기의 불행을 자초한 것이다.

이 전 의원은 대통령의 고향인 ‘영일·포항’지역 출신들을 일컫는 ‘영로팬사’의 핵심 인물로, 그와 함께 권력을 행사한 인사들 중에는 이미 구속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모두 거액의 금품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도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인사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체크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알고도 모른 채 했던지, 실사 몰

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도 문제지만 ‘형님 권력’을 방치하고 관리를 미흡한 이 대통령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이 정권이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 부정한 대선자금 없었다는 얘기가 있다. 그러나 정무원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위원장이 수억 원대의 돈을 받아 대선자금으로 썼다고 사실상 시인한 바 있어 도덕적 치명상마저 입게 됐다.

이제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추가로 받은 돈과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등을 철저히 추적해 대선자금 의혹까지 규명해야 한다. 이 대통령 역시 불행한 일이지만 자신의 친형이 구속된 상황에서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대선 주자들도 이 전 의원의 구속을 반민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금부터 주변관리를 제대로 해야만 5년 뒤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의료 칼럼



김권천

갑상선암은 현재 여성 암발생률 1위로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성에게도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 암 등록본부에서 2009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암 발생률을 산출한 결과 2005년 15만 3237명에서 2007년 16만 1920명으로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기간에 갑상선암은 남성은 24.5%, 여성은 26%로 가장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은 40~50대의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연령대에서 인구 10만 명당 150명 정도가 발생한다.

급증하는 갑상선암

최근에 갑상선암 환자 수가 급증하는 이유는 암 발생 자체가 증가하는 이유 외에 초음파와 같은 진단 기술의 발달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진단된 갑상선암의 50% 이상이 크기가 1cm 이하의 초기 미세암임을 고려할 때, 갑상선암의 급증 이유가 주로 조기 진단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갑상선은 목 앞쪽에 위치한 내분비 기관으로 갑상선 호르몬을 생산하며, 갑상선 호르몬은 인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로서 인체에서 세포들의 대사과정을 적절히 촉진시켜 인체의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갑상선암은 아직 그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으나 방사선에 과량 노출된 경우, 유전적(RFT) 요인, 비만,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가능한 위험인자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특별한 증상이 없으나 갑상선 결절의 크기가 최근 수주 또는 수개월에 걸쳐 갑자기 커진 경우, 선 목소리

또는 성대마비가 동반된 경우, 결절이 주위 조직에 고정된 경우, 결절이 매우 딱딱한 경우, 결절과 같은 쪽의 경부 림프절이 만져지는 경우 갑상선암을 의심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두경부에 방사선을 조사한 병력이 있는 경우, 갑상선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그리고 결절의 크기가 매우 클 때도 갑상선암을 의심할 수 있다.

갑상선암은 유두상 갑상선암, 여포암, 수질암, 미분화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유두상 갑상선암은 가장 흔한 갑상선암으로 전체 갑상선암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암이 자라나는 속도나 전이되는 속도가 느리고, 암의 성격도 순해 치료결과가 가장 좋은 ‘착한암’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유두상 갑상선암은 적절한 치료를 했을 때 10년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거의 완치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갑상선암으로 사망할 확률도 전체적으로 5% 미만으로 치료결과가 매우 좋다.

갑상선암 치료의 원칙은 외과적 절제술로서 수술의 범위는 환자의 연령, 종양의 크기와 숫자, 주위 조직의 침범 범위, 원격전이 유무 등을 고려해 한쪽엽 절제술에서부터 갑상선 전 절제술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최근에는 정기 검진을 통해 갑상선암의 크기가 1cm미만의 초기 미세암이 많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런 1cm미만의 초기 미세암이 고위위조직에 침범이 없을 때는 수술 방식에 따른 치료결과에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갑상선을 절제한 제거하는 갑상선암 절제술로도 좋은 치료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갑상선 절제술의 장점은 갑상선 전체를 제거하는 갑상선 전절제술에 비해 수술의 범위가 작기 때문에 수술 후 후유증이나 합병증이 적고 삶의 질이 좋아 환자들이 선호한다.

현재 갑상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나 수칙은 없으며 일차적으로는 갑상선암의 위험인자들을 피하고, 이차적으로는 갑상선의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에 암을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제일 좋은 예방법이다.

(조선대병원 암센터(외과) 교수)

기고



나무석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바르게 살고자하는 생각은 인간의 천성이고 행동의 기본일 것이다. 이성적(理性的) 동물인 사람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며 지혜롭게 행동하고 성숙하게 살면서 각자의 행복을 추구한다.

자연조건이 좋은 우리 고장은 산자수려하고 시장연선(山田連線)이 풍부하여 우리 조상이 정착, 터를 닦고 화락을 구가하며 행복을 누렸는데 다산정약전의 천락에 의해 정복지가 되면서 주변부로 전락, 역사의 부침을 겪은 후

한국학 호남진흥원이 필요하다

지역 펠렛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내외명분을 지키고 의리와 정도를 숭상하는 올곧은 선비들이 모여들어 누정을 짓고 후학을 양성하는 사문화의 중심지·가학의 용성지로서 미풍양속과 사회규범을 실천하는 총질과 의리를 중히 여기는 정의의 고장으로 자리 잡았으니 우리 후학들은 매우 기쁠 따름이다.

우리 고장을 의향(義鄕), 예향(藝·禮鄕), 미향(美鄕)이라고들 하나 지나온 역사적 사실들을 곁찰할 때 역시 의향이라는 대명사가 가장 적합하리라.

요컨대 올해는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한 지 420년 즉 7주갑이 되는 해이다. 7년 전쟁으로 강토가 초토화된 치욕의 임진왜란은

관군, 의병, 수군을 망라하여 우리 호남 민중이 치른 전란으로서 국가를 보전하고 지탱할 수 있게 된 전쟁이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난 후 지금까지 우리는 마무리 하지 못했다. 침략군의 과수인 풍신수길(倭酋)이 갑자기 저들 침략군은 사과 한마디 없이 퇴각, 휴전상태로 420년 동안 그대로 있는 것이나, 지금이라도 당시의 피해상황을 조사하여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 그리고 임진왜란을 극복한 선조의 유곡충정을 가리는 공원과 박물관을 우리 고향에 조성·건립하여 기억하고 선양하고 각성하는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임진왜란 때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若無湖南 是無國家)는 이 말 한마디가 호남

이 나라를 구했다는 것과 같지 않은가.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호남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말로는 호남·전라도가 잘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호남의 전통과 호남의 정신을 되살리는 데는 크게 소홀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한국학 호남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소의도 바로 이와 같이 역사적 사실을 구체화하고 실증화하여 창조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데 있다.

상고사는 복원하고 중세사는 객관화할 것이며 근세사는 실증적으로 현상하여 민족 정체감 조성을 이바지할 것이다.

서기 1145년 ‘감부시’인 삼국사기를 저술한 후 3국 유민들이 각기 고토수복을 위한 전란을 일으켰으나 1280년경 ‘일원’이 삼국유사를 출간한 후 고토회복 전란이 끝이던 당시 역사적 족적들을 살펴볼 때 문화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한국학 호남진흥원 이사장)

無等鼓

스페인인 지난 10일 재경김정은 행권 구조조정을 감시할 유럽연합(EU), 유럽중앙은행(ECB), 국제통화기금(IMF) 등 이른바 트로이카팀의 방문 실사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은행권에 대한 구제금융 1000억 유로(140조 원) 가운데 1차분 300억 유로(42조 원)를 이달 말까지 서둘러 지원받기로 한 대가다. 따라서 스페인은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에 이어 구제금융 채권단에 ‘경제주권’을 내놓는 네 번째 유럽 국가로 전락했다.

대한 현실 인식이 우리의 수준이다. 정치권에서는 ‘국가권력에 경제권력에 봉사해 왔다’며 견갑부회 한다. 그러나 경제권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결정된다. 대기업의 불법 행위가 있다면 엄정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경제민주화론은 국가와 재벌의 2분법적 사고에 기초한다.

물론 ‘경제민주화’가 이슈가 된다는 최근 기록권들의 소유욕이 멈추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서민은 더욱 힘들어 지는 데 문제가 있다. 문이발식으로 권력을 확대하는 일부 대기업의 잘못된 행태는 바로 잡아야 한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최종 목표는 더 잘먹고 잘사는 이들이 많아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자유시장화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기업들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해한 민주당 대표들은 재벌개혁에 당 운명을 걸고 나섰다.

경제민주화



글로벌 경제위기가 이렇지 않더라도 대통령 선거를 160여 일 앞둔 우리 사회는 연일 ‘경제민주화’를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기업들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해한 민주당 대표들은 재벌개혁에 당 운명을 걸고 나섰다.

이들처럼 유로존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먹구름이 보이지 않는 것인가. 성장과 가계부채 등 자금의 경제위기에 대한 고민은 찾기 어렵다. 위협한 상황에

경제체제에서는 결과에 대한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보장되는 게 중요하다. 경제민주화를 또 다른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경제민주화를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포퓰리즘 쪽으로 생각해서는 160여일 후 주인공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고졸자 취업문 더 넓히도록 정부·기업 합심해야

정부가 기업들에게 고졸자를 채용하라고 장려하고 있어서 재작년과 작년 초까지 반짝 고용 채용이 좀 늘어나는 분위기가 있었다. 방송사에서 고졸자를 뽑고, 은행에서도 고졸 모집 광고를 내서 그게 뉴스가 되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학벌 만연주의와 너도나도 대학에 가는 낭비적인 요소를 막자는 뜻이었다. 지금 솔직히 무등산에 올라가 돌맹이 하나 던지면 10명 중 9명의 대졸자 머리에 맞을 거라는 농담을 할 정도로 대졸자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그런데 고졸자 채용이 늘어나는 분위기라 크게 반겼는데 얼마 전 보도를 접해보니 작년 중반 이후 고졸 청년들의 고용률은 되려

더 떨어졌고, 대졸 청년과의 임금 격차는 더 벌어졌다고 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발표한 고졸 청년 취업 결과를 보니 고졸자 고용률은 2003년 65%에서 작년엔 59.1%까지 내려갔다는 것이다.

이는 취업시장에 아직도 학벌주의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취업시장의 학벌주의는 이른바 ‘SKY(서울·고려·연세대)’로 불리는 명문대와 서울의 상위 10개 대학을 필두로 한 취업구조가 바로 말해주는 것이다. 학벌은 임금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SKY 졸업생의 평균임금이 비해 전문대 졸업생의 평균임금은 3분의1이나 적다.

▲이학식·광주시 광산구 양산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이메일 opinion@kwangju.co.kr

| | |
|---|---|
| 光 卍 日 報 | The Kwangju Ilbo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시가1(1)번 대표전화 222-8111-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062-227-9600 | 논설주간 申滄榮 편집국장 曹庚亮 |
|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집부 2200-649 여론채취부 2200-621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서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팀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